

신행정수도건설은 지속가능발전의 시금석

이 상 진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장)

지난 해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신행정수도건설을 바라는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위헌판결로 인하여 신행정수도건설은 그 절차적 근거를 상실하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신행정수도건설이 무산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최후의 선택'인데도 이에 대한 반대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행정수도건설의 목적이 국민들 가슴속에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세계화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신행정수도건설은 시대적 변화의 산물이다. 현대 시대는 세계화·지방화시대이다. 세계화는 전 지구를 무한대

의 경쟁세계로 이끌고 있다. 과거 저임금에 기초하여 품질경쟁력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의지하며 급성장해 온 우리는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의 도약은 새로운 디딤대를 토대로 발돋움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과거에는 수도권 1극 거점개발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통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과거의 경제발전전략은 경쟁력이 높은 한 지역과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발전시킴으로써 그 파급의 효과를 다른 분야의 발전으로 유도하는 총량적 발전전략이었다. 과거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은 신속한 경제발전에는 성공하였으나 수도권 집중, 지역간·도농간 불균형 확대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에서는 과거와 같은 불균형 발전전략에서의 물류비용·지가 등 고비용·저효율의 불경제로 인하여 선진 경제와의 경쟁에서 우위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도권의 신행정수도건설 반대론자는 수도권의 육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고 주장한다. 수도권을 육성하면 수도권은 더욱 발전될 수도 있다.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되겠는가? 아이ולם 소리조차 듣기 힘든 현재의 우리 농어촌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다. 수도권 육성의 결과 경제이익을 획득한 수도권 기업이 공동화된 지방에 무엇을 보고 투자하겠는가? 수도권 기업은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자발적 주체가 될 수 없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

권에서 더 이상 이윤을 창출할 수 없을 때, 그들은 공동화된 우리의 지방이 아니라 더욱 싼 임금을 찾아 해외로 이전할 것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지방을 육성할 것인가? 기업들은 서울이 더 저렴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지방은 더욱 공동화되고, 경쟁력을 상실한 수도권도 점차 쇠퇴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수도권에서 가치를 창출하여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부터, 지방이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여 수도권과 더불어 국가의 더 많은 전체 가치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 세계화시대에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신행정수도건설

신행정수도건설은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몸부림이다. 서울시민에게 물어본다. "공기오염으로 인해 요즘 아침 안개를 호흡할 수 없는 서울이 좋으세요? 시끄러움으로 가득한 도시가 그리우세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혼잡한 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출·퇴근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교통지옥이 좋습니까? 시외로 나갈 때마다 겪는 교통체증, 지겹지도 않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강남 8학군에 이사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까?..." 이것이 '개발최고'에 젖어있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동경하는 '도시와 개발의 허상'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생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들이킬 수 있는 삶,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삶, 냇물을 보고 슈베르트의 "송어"를 생각할 수 있고 숲을 보고 수채화를 그릴 수 있는 생활, 흙냄새를 맡으며 밤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 하늘... 이것이 산업사회의 병폐를 겪고 난 선진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삶의 방향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수도권은 집중되어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로 변하고 있고, 지방은 황폐화되어 흉물스러운 폐가가 증가하고 있다. 밤하늘의 별은 공해로 인하여 사라지고, 수채화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산은 아파트 숲으로 변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쾌적한 삶(아메니티 : Amenity)"을 추구하는 동안, 우리의 지방과 농어촌은 자생력을 상실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을 발전시키고, 각각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발전전략이다.

위헌판결과 신행정수도건설

신행정수도건설은 단일의 사업이 아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각 지방에는 지방의 특성에 맞추어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전략·지역(地緣)산업이 육성될 예정이고, 지방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위헌판결로 신행정수도건설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무엇이 중단되었는가? 신행정수도건설이 지녔던 국토를 균형되게 개발하자는 목적이 잘못되었는가? 국토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개편하자는 의도가 잘못되었는가? 목적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신행정수도건설이 다시 논의에 부쳐져야 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대부분의 반대는 그 목적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수단의 절차에 대한 부정이었고, 현재의 위헌판결도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신행정수도건설의 목적이 합당하고 현재의 위헌판결이 절차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라면, 답은 한 가지이다. 절차적 타당성을 검증받고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목적과 명분이 정당하다면 그 수단적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